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특화사업들, 각종 특례로 '활짝'

전북도민 중심으로 상향식 추진
소외된 전북 발전 위한 염원 모여

131개 조항 · 333개 특례 부여
5대 핵심 산업 · 3대 기반 갖춰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전북만의 특화사업들이 각종 특례를 통해 활짝 꽃 피울 수 있게 됐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먼저, 우리나라 최초로 시도하는 '프론티어' 특례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았다. 전북의 특화산업들이 각종 특례를 통해 강점과 특수성을 살리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로, 전북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국가지원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특별법 상 18개 사업에 대해 국가 재정지원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개별사업 추진 시 실효성을 가지게 된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는 국가 주도로 이루어진 제주·세종과 달리, 상향식으로 추진된 '도민 중심' 특별자치도이다. 국가균형발전에서 소외된 전북을 발전시키기 위한 도민의 염원이 모여 전북의 특화산업 발전이 시작된다.

우선, 명칭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된다. 법안 명칭에 '생명경제도시'라는 전북특별자치도의 핵심 비전을 명확히 하고, 비전 실행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특별법 개정으로 131개 조항, 333개 특례를 부여받으며, 5+3으로 표현되는 5대 핵심 산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3대 기반을 갖췄다.

5대 핵심 산업은 다음과 같다.

먼저, 농생명산업지구를 통해 '농생명 산업'이 특화 발전한다.

지구 내에서, 농림부장관이 가진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도가 이양받아 식품·종자·미생물·동물용의약품 등 특화산업의 생산-가공-유통-연구개발이 집적화된다

'문화관광산업' 분야로 전북의 우수한 문화 자원 활용이 가능해진다.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지원센터를 설립해 전북의 다양한 유·무형의 원천 콘텐츠가 집약되고, 국제케이팝학교를 설립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뷰티, 패션, 영상, 공연 등 연계 산업까지 확장이 가능해진다.

산악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문화·휴양·복지단지 활성화를 통해 오랜 규제로 묶여 있던 산악지역에 활력을 주게 된다.

또한,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특례로 산업 동력의 새 축이 생긴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전북이 전국 최초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연구기관을 운영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고령친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고령인구 케어와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게 된다

'미래 첨단산업' 특례로 전북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한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융복합산업, 수소중심도시, 이차전지, 무인이동체 등 미래 첨단산업을 전북의 가장 큰 먹거리 산업으로 키워나간다.

AI, 빅데이터 기반의 금융혁신 기업 육성 및 집적화가 가능해지고 고부가가치 핀테크산업을 미래 핵심 서비스산업으로 키워 디지털금융의 거점으로 조성된다.

끝으로, '민생특화산업' 특례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지역중소기업 제품·지역 농산물 우선구매, 수산종자산업 등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민생특화 특례를 통해 변화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된다.

3대 기반특례로는, 먼저 전북 특성에 맞는 단지·특구·지구 지정으로 산업인프라가 구축된다.

첨단과학기술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14개 단지·특구·지구를 지정,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육성하게 된다.

안정적 인력확보 기반도 마련된다.

농생명산업지구 등 4개 특화지구에 외국인 체류기간을 별도로 지정하여 노동시장 인력난 해소와 지역 산업계의 중추적 인재로 정착이 가능하게 되며,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과 고용서비스 전문기관 설치로 우수한 노동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금융전문인력 양성, 지역대학과 협업 지역특화형 인재 양성 등 기업의 인력수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끝으로, 핵심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특례도 실행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 등은 전북형 지구·단지 지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며,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기관 지정 권한으로 신속한 인증, 매출향상 등 관계산업의 발전도 기대된다.

/김재훈 기자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 원동력

도정·여야 정치권 도민 힘 모아 협치

김관영 도정, 전북발전 위해 협치정신 내세워
한병도 · 정운천 의원, 법 제정 · 통과에 앞장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등도 뒷받침하는데 심혈
전북인 서명부 · 500만 도민 마음, 국회 움직여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100여일만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도정과 도내 여·야 정치권, 도민들이 한데 힘을 모은 협치의 산물이다.

김관영 도지사가 민선 8기 전북도정을 시작하면서 "전북 발전을 위해 진영과 이념을 따지지 않고 한마음으로 헌신하자"며 협치의 정신을 화두로 끄집어냈다.

이후 전북도정은 전북 발전을 위한 진정한 협력자로 여야 전북 국회의원들과의 소통을 매월 개최하는 등 정례화해 나가며 현재도 전북의 각종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협치는 지난해 전북도의 지역?경제적 특성을 살려 자치권이 보장된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국토균형발전과 전북지역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에 중점을 두려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국회의원 모두가 나서며 함께 성공을 위한 변화의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당시 양당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 의원과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운천(비례대표)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고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 소속 의원들을 전북편으로 끌어들였다.

이어 한 의원(도당 위원장)과 정 의원(현 전주시을 당협위원장)은 올해 특별법에 실질적 권한을 담기 위한 법률안 전부개정안 발의에도 먼저 나서 각각 소속 정당 의원들을 설득해 가며 일사천리로 국회 통과를 이끈 주역들이라 할 수 있다.

두 의원은 "협치를 통해 큰 성과를 올리게 됐다"며 전북도와 원팀으로 앞으로도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아지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입을 모았다.

여기에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도의장을 비롯해 도의회 특별위원회 강태창 위원장 등 지역 정치권은 물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강병원, 김용판 양당 간사,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과 소병철, 정점식 양당 간사들의 지원사격이 이뤄낸 합작품이란 평가다.

뿐만 아니라 손으로 눌러쓴 110만 전북인들의 서명부와 500만 도민의 마음이 국회를 움직인 가장 큰 원동력이 됐다.

/김재훈 기자

제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12일 전북에서도 출마 예정자들이 일찌감치 후보 등록을 마치고 총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사진 왼쪽부터)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있는 고종윤 변호사, 이덕춘 변호사, 최형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김원종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위원장.

'나는 예비후보자' … 전북, 총선 레이스 돌입

고종윤 · 이덕춘 · 최형재 · 황현선 · 김원종 등 어제 오후 2시 현재 8명 등록 마쳐

제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12일 전북에서도 출마 예정자들이 일찌감치 후보 등록을 마치고 총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등록 첫날인 이날 오후 2시 현재 전주에서 4명 등 8명의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강세지역이다보니 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주를 이뤘다.

이날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주 완산선관위에 전주을 지역구 예비후보로 나선 고종윤, 이덕춘 변호사와 최형재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쳤다.

먼저, 고종윤 변호사는 민주당에서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지난 대선서 민주당 중앙선대위 조직본부 미래희망단 중앙단장 및 전북특보단 공동상임단장을 역임했다.

등록을 마치고 나온 고 변호사는 "젊음의 희망찬 미래를 함께하자"며 "전주을 시민들이 자랑스러워 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짧지만 강한 포부를 밝혔다.

이덕춘 변호사는 전주을 지역구 탈환에 나섰다.

이 변호사는 접수 이후 "깨어있는 시민이 가장 많은 전주을 선거구에 다시 도전 한다"며 "지난번 민주당 최종 경선에서 떨어졌던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덕춘 변호사는 고려대를 졸업하고 한국외환은행, 전북일보 기자를 역임했다. 지난 대선때는 이재명 후보 선대위 전주시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으며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형재 부의장도 등록을 마치고 "몇 번의 고배를 마셨지만, 다시 일어나 변치 않는 소나무처럼 늘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했다"며 "윤석열 정권의 탄생은 국민의 비극이고, 이 정권을 끌어내리는 것만이 민생을 살리고 도탄에 빠진 국민을 구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의지를 다졌다.

그는 또 "이재명 대표의 기본사회, 대동사회를 시대적 소명으로 생각하고, 전북이 잘 사는 나라를 위해 신명을 다 하겠다"고 출마 일성을 밝혔다.

최 부의장은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전북위원회 공동대표, 민주당 전주을 지역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전주덕진선관위에 전주병 예비후보 등록신청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 운동 행보에 나섰다.

그는 "전북 현안 해결과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전북정치를 위해 더 치열하게 맞서고 시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며 "검찰독재 윤석열 정권 심판, 전략과 실천을 가지고 책임지는 전북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황 전 행정관은 청와대 선임행정관 시절 조국 민정수석 보좌관을 지냈다.

김원종 민주당 사회복지부위원장도 이날 오전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임실·순창·남원 지역구에서 출마를 위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김 부위원장은 부위원장은 등록을 마친 뒤 가장 먼저 만인의총을 찾아 "현재 우리 지역은 분열을 극복하고 발전과 변화를 선도할 역량 있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한 때"라며 "지역 발전을 위한 일이면 무슨 일이든 발 벗고 나섰고 앞으로 나설 준비가 됐다"며 각오를 다졌다.

김 부위원장은 서울대 재학 중 행정고시 합격 뒤 보건복지부에 근무하며 2000년 국민의 정부 청와대에서 생산적 복지의 국정이념을 구체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총괄 기획한 보건복지분야 전문가이다.

이 밖에 익산을 예비후보에 이춘석 전 의원, 전권희 진보당 익산시위원장, 김제·부안 예비후보에 박준배 전 김제시장이 각각 등록을 마쳤다. /뉴시스

민주 안호영 의원, 시사뉴스 등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다시 한 번 2023년도 국정감사 성과를 인정받으며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3관왕을 달성했다.

안호영 의원은 12일 수도권일보·시사뉴스가 선정한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안 의원은 지난달 9일과 30일 각각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데 이어 언론사로부터도 국정감사 성과를 인정받게 됐다.

안호영 의원은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당·농업인단체·언론 모두로부터 우수의원에 선정돼 더욱 뜻깊게 다가온다"면서 "완진무장 군민과 농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도의회 예결특위 예산 심사 마무리

내년 도 예산안 9조1051억
도교육청 4조5022억원 의결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는 11일 전북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과 전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했다.

세수부족에 따른 역대급 심사라는 평가와 함께 본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요구되고 있다.

심사결과, 전북도는 2024년도 예산안 총 9조1,051억원 중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17억원 전액 등 총 52건 98억원을 삭감했다.

전북도교육청은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 4조5,022억원 중 교육홍보 활동지원 18억원 중 4억원 등 총 60건 107억원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했다.

한편, 도와 도교육청의 2023년도 정리추경안은 도는 수정예산안에 요구했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야외간판 설치 사업' 4,000만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에 반영했으며, 도교육청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예결위원들의 권고사항이 수정예산안에 반영돼 개선된 사항으로는 전북도의 경우 '장애인복지관 인력 운용(시군)'과 관련해 인력 운영 시, 법정기준 인원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인력 충원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해 수정예산안으로 8명의 충원 인건비 6,400만원이 증액 편성돼 원안 가결했다.

도교육청의 경우 국가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교육청 예산이 전액 삭감된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 사업' 역시 수정예산안으로 12억원이 신규 편성돼 원안 가결함으로써 청소년 건강권 보장과 바른 성장을 도모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보편적 복지 실현에 앞장섰다.

심사에 따른 부대의견으로는 여러 위원들이 제기한 '시외버스 재정 지원'과 관련해 경영수지분석 및 운송원가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전북도 및 도교육청 예산안은 13일 본회의를 거쳐 예산으로 최종 확정된다.

/김재훈 기자

군산시의회 예결특위, 19일까지 내년도 본예산 심의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미숙)가 12일 2024년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최종 심사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할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6445억 2백만으로 2023년 본예산보다 0.6% 증가했으며, 일반회계는 0.2% 증가한 1조 4911억원, 특별회계는 4.4% 증가한 1,533억원이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는 최근의 경기 부진과 세수결손에 따른 긴축재정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 계층의 복지를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하겠다고 밝혀 면밀한 심사를 예고했다.

한편, 2024년 예산안은 오는 12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